



: 2020-10-0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7049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나.라. D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지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지영(피고인 D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5. 19. 선고 2019노426, 2020노116(병합),
2019전노4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2020-10-05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D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_____



.
: 2020-10-05

대법관 권순일 _____

주심 대법관 이기택 _____

대법관 박정화 _____